불교학계 '4차산업' 논의 본격 시동

한국불교학회, 3~7월까지 월례 워크숍 개최

3월 25일 동국대 만해관의 한 강의실.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스님과 교수부터 사미 스님, 일반 재가자까지 들어찼다. 모두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의 '불교와 4차산업' 1차 월례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최호진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최 교수는 알파고를 비롯한 IBM의 왓슨, 한국의 엑소브레인 등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정의, 향후 발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불교학회의 '불교와 4차산업' 월례 워크숍은 동일 주제 국제 학술대회에 앞서 4차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불교학회는 오는 7월까지 5회에 걸쳐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스마트 시티 △가상 및 증강현실(VR · AR)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 50여 명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는 대규모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국불교학회의 월례 워크숍과 대규모 학술대회는 불교학계의 '4차산업'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 4차산업에 대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 ·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지에

12월 1~2일 국제 대회도
불교평론, 겨울 특집 다뤄

시대적 논의 진행 '고무적'
4차산업 불교 역할 조명해야
'재현 위기' 바탕 논의 필요

대한 불교적 논의는 그간 전무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학회 법인 이사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은 "4차산업 시대는 현재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불교의 역할론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4차산업'에 대한 논의는 진행해야 한다"며 "4차산업 기술의 이해와 전통적 불교가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워크숍과 국제대회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학회는 3월 25일 동국대 만해관서 '불교와 4차산업' 월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7월까지 5차례 진행된다.

현재 '4차산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불교학 관련 단체는 한국불교학회를 제외하면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유일하다. 〈불교평론〉은 올 겨울호 특집으로 '4차산업'을 다룰 예정이다.

이제 첫 발은 내딛는 '불교와 4차산업'의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4차산업 기술의 인식론적 접근과 응용 · 활용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공지능로봇의 불성 연구'로 2008년 조계종 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던 보일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강사)은 "불교는 세상의 이야기이며, 변화에 맞춰 시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종교다. 불교학계의 '4차산업' 관련 논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고무적"이라며 "이미 티베트 스님들은 유식과 뇌과학을 연계한 연구를 미국 대학서 진행 중이다. 한국불교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잉여 노동이 발생하는 4차산업 시대에는 문화와 정신수행이 더 큰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며 "정신수행 분야는 불교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4차산업에 대한 논의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불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포교에 활용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4차산업 기술에 대한 불교적 인식론을 먼저 고찰할 것을 주장했다. 가상과 현실에 공존하는 디지털시대의 '재현의 위기론(the crisis of representation)'을 전제한 이 교수는 "산업 · 공학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는 4차산업 시대를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가상과 실재를 연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을 면밀히 봐야 4차 산업시대를 제대로 보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佛사상가 술락 시바락사 청년불자·활동가 만난다

4월 21일 신대승네트워크 초청

세계적 시민사회 운동가이자 불교사상가인 술락 시바락사(Sulak Sivaraksa) 박사가 방한해 한국의 청년 불자 및 시민사회활동가들을 만난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술락 시바락사 박사 초청 대화마당을 4월 21일 안국동 W스테이지서 마련한다. '불교, 평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최근 사드 배치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상황을 비롯해 종교 갈등, 민족 갈등 속에서 불교 및 시민사회의 올바른 역할을 모색키 위한 자리다.

술락 시바락사 박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 중 하나다. SNF와 SEM을 설립하고 태국을 비롯해 미얀마 · 캄보디아 · 라오스 지역에서 대안적인 교육을 제공, 풀뿌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2회에 걸쳐 노벨평화상 후보에 지명된 바 있으며, 대안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과 '니와노평화상'을 수상했다.

박아름 기자

'세월'의 슬픔, 甘露(감로)로 달래다

불화가 이수예 등 작업 감로도, 장곡사에 조성 봉안

세월호, 촛불집회, 소녀상 등 최근 대한민국의 시대상이 한 폭의 불화 감로도 안에 담겼다. 곳곳에 보이는 노란 리본과 팽목항, 세월호, 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광화문 광장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모습이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불화가 이수예 작가와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연구원 6명이 공동 작업한 장곡사 감로도가 4월 8일 하대웅전에 봉안된다. 세월호 사고 3주기를 앞두고 조성된 이 감로도엔 참사 희생자들에게 아미타부처님과 7여래가 감로와 같은 법문을 베푸는 장면을 묘사, 희생자들이 극락에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감로도는 180×177㎝ 크기로, 상 · 중 · 하 3단 구조로 구성된다. 상단은 불보살의 세계, 중단은 천도재를 지내는 제단과 법회 장면, 하단은 윤회를 반복하는 아귀와 고혼(孤魂), 중생들의 현실세계를 표현했다. 제작기간은 총 6개월이 소요됐으며, 작업 중 세월호 인양 및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감로도 전체 모습.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작가들이 더욱 엄중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후문이다.

이수예 작가는 "최근 벌어진 대재난과 사회적 문제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다"면서 "지금을 사는 우리는 시대의 뒤쪽으로 사라지겠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은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지정문화재 방재 시설 설치 의무화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공포 · 시행

소방 · 재난 방지 시설 설치
도난 막기 위한 장치 강화

앞으로 지정문화재에는 방재 · 도난 시설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재난방지 대책 마련과 공동연구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일부 내용을 3월 21일 개정 ·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방재 및 도난 시설 설치가 신규 도입된 점이다.

신규 도입된 문화재보호법 14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과 지자체장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화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했으며, 소방 관련 법에 근거한 소방 · 재난시설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정 · 등록문화재와 보호물, 보관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과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문화재의 연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법 개정에 의해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하는 산 · 학 · 연간 공동연구가 가능해져 문화재의 보존 · 관리 ·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로 명시했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돼 재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긴급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중 '문화재의 공동연구 사항과 정기조사 근거 도입, 문화재 재난방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은 1년 후인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은 즉시 시행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국민 공론 場서 사드배치 다뤄야"

불시넷, 정부 강행에 비판 성명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 11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는 3월 27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는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한다며, 정부가 일방적 추진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시넷은 "이미 이웃나라들의 반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사드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어하는데 꼭 필요한 무기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시넷은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 국민과 대화로 풀어야한다면서, △한미 간 협정문서 공개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 유효성 △국회의 비준 필요 여부 등 국민들의 물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